

행정학 기출문제 2008.5.24. 지방직 수탁 9급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높지 않았으나, 까다로운 문제가 몇 개 있었습니다. 체감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실제 점수는 생각보다 높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 고득점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총론과 인사행정문제 비중이 높게 나오고, 조직론과 정책학 비중이 낮았습니다만, 16번 문제(대부분 수험서에 수록되지 않은 주제)를 제외하면 기본 주제들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일부 문제(예를 들어, 13번 문제)는 정확히 아는지를 묻고 있으면서도, 9번 문제처럼 세심하게 고민하지 않고 출제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복원 해설에서 교재에 관련 페이지를 제시하지만, 이번 문제는 기본 주제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를 생략합니다.

9급의 경우 서울시가 거의 마지막일 듯합니다. 남은 기간 꾸준히 하는 자에게 합격의 기쁨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강제명(남부행정고시학원 행정학 전임)

0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통적 관료제의 구성 원리와 부합하는 인사제도이다.
- ② 채용 당시의 직무수행 능력이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보다 중요시된다.
- ③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다.
- ④ 계급제, 폐쇄형 공무원제, 일반행정가주의에 바탕을 둔 제도이다.

02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으로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아이디어를 교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 ① 전통적 델파이 기법
- ② 브레인스토밍
- ③ 정책 델파이 기법
- ④ 변증법적 토론기법

03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이념적인 조직형태인 관료제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무의 수행은 문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직무수행 결과는 문서로 기록·보존된다.
- ② 관료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법규에 의해 규정되며, 상관의 권한은 업무활동에 한정된다.
- ③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관료가 모든 직무를 담당하며, 이들은 시험 또는 자격증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채용된다.
- ④ 관료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어려운 사정이나 개별적 여건을 고려하는 자세를 갖

는다.

04 우리나라에서의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실천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②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 ③ 대우공무원제도 ④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05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이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 ② 인간은 모든 대안들에 대하여 등급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
- ③ 정당 및 관료는 공공재의 소비자이고, 시민 및 이익집단은 공공재의 생산자로 가정한다.
- ④ 뷰캐넌(J.Buchanan)과 툴록(G.Tullock)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06 한국정부의 개혁에 영향을 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과를 중시하고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고객지향적인 행정을 추구한다.
- ②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의 강화를 통해 일선공무원의 행정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③ 경쟁원리 또는 민간경영기법의 도입과 같은 시장과 유사한 기제를 활용한다.
- ④ 정부기능의 민영화와 감축을 통한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07 예산의 법 형식은 크게 법률주의와 예산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은 세입법(Revenue Act)을 의회에서 제정한다.
- ② 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미국은 잠정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한국은 예산에 의해 법률을 개폐할 수 없다.

08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기준예산제도(ZBB)는 모든 지출제안서를 영점 기준에서 검토한다.
- ② 품목별예산제도(LIBS)는 투입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사업성과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 ③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부사업과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④ 계획예산제도(PPBS)는 상향식 예산 접근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09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긴급재정명령, 선결처분
- ② 예산 한정성의 원칙 - 계속비,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월
- ③ 예산 단일의 원칙 -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목적세
- ④ 예산 공개의 원칙 - 국가 기밀에 속하는 국방비·외교활동비

10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협력방식으로만 구성된 것은?

ㄱ. 사무위탁	ㄴ. 지방자치단체조합
ㄷ. 분쟁조정위원회	ㄹ. 지방자치단체연합

- ① $\neg$, $\perp$
② $\neg$, $\exists$
③ $\perp$, $\vdash$
④ $\vdash$, $\exists$

11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서 중시했던 가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정치적 중립성 ② 조직의 인간화
③ 행정의 대응성 ④ 사회적 형평성

12 근무성적 평정시 평가자가 모든 피평가자들에게 대부분 중간범위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으로 옳은 것은?

- ① 연쇄효과(halo effect) ② 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
③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13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업관주의는 소수상위계층의 공직독점을 가져온다.
- ② 업관주의와 실적주의는 모두 민주성과 형평성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 ③ 실적주의에서 공직 임용은 개인의 능력, 지식, 출신, 기술, 자격, 업적에 근거해야 한다.
- ④ 실적주의는 필연적으로 직업공무원제도를 동반한다.

14 동기이론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머슬로(A. Maslow)는 욕구의 강도와 단계에 따라 인간이 자신의 일정한 욕구를 충족, 유지해 나간다고 주장한다.
- ②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에서 동기요인에는 머슬로의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욕구가 포함된다.
- ③ 앨더퍼(C. Alderfer)의 ERG(existence, relatedness, growth)이론에서 성장욕구에는 머슬로의 애정(love) 욕구가 포함된다.
- ④ 브룸(V. Vroom)은 동기부여가 보상의 내용이나 실제보다는 조직구성원이 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매력을 느끼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15 우리나라에서 행정통제를 수행하는 내부통제기관으로만 구성된 것은?

ㄱ. 감사원	ㄴ. 국회	ㄷ. 헌법재판소
ㄹ. 국민권익위원회		ㅁ. 안전부

- ① $\neg$, $\sqsubset$, $\sqcup$
② $\neg$, $\sqsubset$, $\square$
③ $\neg$, $\sqcup$, $\square$
④ $\sqcup$, $\sqsubset$, $\square$

16 행정재산 중에서 공용재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 ① 국공립공원 ② 국공립학교
③ 등대 ④ 소년원

1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 중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립, 갈등하는 경우의 비상적 해결수단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재의 요구 ② 직무이행명령
③ 준예산 집행 ④ 선결처분

18 다양한 정책수단 가운데,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voucher)형식을 이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들로 구성된 것은?

ㄱ.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 수업’	ㄴ. 법무부의 ‘보호관찰 사업’
ㄷ.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초노령연금 사업’	ㄹ. 국토해양부의 ‘주택장기임대 사업’

- ① $\neg$, $\perp$
② $\neg$, $\exists$
③ $\perp$, $\vdash$
④ $\vdash$, $\exists$

19 전자정부가 구현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장점만으로 구성된 것은?

- ㄱ. 국민 참여 증진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 ㄴ. 행정의 생산성 향상
- ㄷ. 대고객 관계의 인간화 촉진
- ㄹ.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공급 및 민원인의 비용 절감
- ㅁ. 개인정보 및 인권의 보호 강화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2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의 설치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
- ③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정해야 하며, 조례에 의한 세목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 ④ 자치권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자치입법권, 자치사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라 할 수 있다.

01

②

직업공무원제는 전통적 정부관료제에 적합한 인사제도로, 정부관료제에 종사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조직·운영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즉, 공직을 보람있는 직업으로 알고 젊은 나이에 공직에 들어가 공직에서 성장하고 상위직에 진출하여 전 생애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인사제도이다.

계급제, 폐쇄형 인사제도, 일반능력자주의적 임용체제를 바탕으로 하며, ② 전문지식보다 장기적 발전가능성이나 잠재력 등을 더 중시한다.

02

①

설문은 델파이에 대한 설명이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들의 익명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각기 독자적으로 형성된 판단들을 통계기법을 통해 종합한다. ③ 정책델파이는 델파이의 기본 논리를 적용하여 정책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그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대안은 전문가 집단이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존재하며, 특정 수혜자 집단과 희생자 집단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들 이해관계자 집단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② 브레인스토밍은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집단적 토의를 하며, 전문가 외에 상상력이 풍부하고 선입견에 구애받지 않는 독창적인 사람과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다. 가정분석이 선례가 있을 때 적합하다면, 연상기법을 사용하는 브레인스토밍은 선례가 없을 때 적합한 방식이다. ④ 변증법적 토론은 델파이와 마찬가지로 집단사고의 맹점을 피하려는 것이지만, 대면토론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델파이와 다르다.

델파이 기법	정책 델파이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위주	이해관계자 집단	전문가 외 이해관계자 참여
익명성(대면토론 ×)	선택적 익명성(대면토론 ○)	토의(즉흥적·자유분방한 방식)
합의된 의견도출(중위값)	다양한 이해관계 수렴	연상기법, 아이디어 창안

03

④

관료제는 고도의 분업화 및 전문화에 의한 과업의 분화, 명확히 규정된 권한의 등급과 위계질서에 입각한 계층적 통합, 공식화된 합리적 규정·규칙·절차에 의한 조직 운용 등의 특징을 보인다. ④ 규칙에 의한 업무수행(비정직성 ; inactivity ; impersonality)은 개별 상황이나 고객의 지위를 떠나 공평무사하게 객관적으로 유지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04

③

대표관료제는 관료를 사회의 주요 구성 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층원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종·성·직업·신분·계층·지역 등의 기준에 의해 분류되는 국가 전체의 부문별 인력을 흡수하는 인적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성고용평등제, 장애인고용할당제, 인제지역할당제, 이공계 우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③ 대우공무원제도는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제도로,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년수 이상 근무

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05

③

Buchanan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학적 분석에 의해 확산된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분석 도구를 국가이론, 투표규칙과 투표행태, 정당정치, 관료행태, 이익집단 등의 연구에 적용한 연구를 말한다.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중시하고, 이를 위해 경쟁을 통한 행정의 대응성과 공공재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 한다.

공공선택론은 ③ 공공재의 경우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시장에 의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공급하지만(즉, 공공재의 생산자로 정치인과 관료를, 소비자로서 시민을 가정한다), ① 정치적 행위자인 정치인과 관료, 시민은 사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경제인으로 가정한다. ② 참고로, 합리성이란 완전한 정보와 경제적 타당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단, 현대이론은 정보의 불완전성을 인정한다). 즉, 자신의 목적을 위한 알려진 대안에 대해 비교할 수 있다고 본다.

06

②

Hood에 의해 1991년에 처음 사용되었고, OECD에서 정부혁신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신공공관리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즉, 작은 정부를 위한 민영화/규제완화를 추구한다. 또한,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관리, 즉 민간의 경영기법과 시장원리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② 성과관리는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대신 결과를 통해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전략지향성	전통적 행정시스템의 경우 법령과 규칙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신공공관리는 목표와 업적에 의한 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직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전략목표 설정을 중시한다.
조직관리	• 기능통합 : 전통적 행정이 단일업무 중심의 기능구조를 특징으로 한다면, 신공공관리는 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위한 유연한 구조와 기능의 통합을 강조 • 분권화된 구조 : 계층제보다는 느슨한 구조에 의한 네트워크 관리를 지향 즉, 자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소규모 조직 간의 계약에 의한 관리를 추구 • 경쟁체제 : 경영기법의 도입과 내부시장원리를 통해 공공부문의 경쟁성을 제고
고객지향성	성과와 품질 향상을 강조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이때, 전통적 행정이 서비스 제공의 단일성(형평성)을 지향했다면, 신공공관리는 경제성·효율성·효과성을 추구하며, 개인화면(표적 대상별) 통합서비스를 지향

07

③

예산법률주의는 법률의 형식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영국과 미국의 제도이며, 예산서주의는 대륙계국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법률과 다른 형태인 예산서를 통해 예산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④ 예산서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도 국회의결을 요한다는 점에서 예산은 규범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국내통설이며, 예산과 법률은 상호구속한다. 즉, 예산으로 법률을 개폐할 수 없으며, 법률로 예산

을 변경할 수 없다.

① 세입과 세출에 대한 의결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한다. 연차예산은 소관별로 별개 법률로 이루어지고(즉, 각각의 세출예산법이 성립된다), 세입은 세입법이 제정될 분이며 의결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세출예산법에 세출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미리 일반법에 의한 세출예산 계상의 승인을 요하며(이를 수권법이라 한다), 세출예산법으로 수권법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윤영진, 새재무행정, 대영문화사, pp.122-123). ②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수권법을 요하지 않는다.

③ 미국의 대통령은 수권법이나 세출법에 대하여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부분적인 항목에 대한 거부, 즉 일부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세입법은 세입에 관한 추계로서 국회 심의 자료로 대통령이 제출하는 예산서에 기재되는 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부대상이 아니다.

08

④

② LIBS는 행정부제출예산제도와 같이 발달한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지출대상과 금액 등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있어서 회계책임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입지향적 예산제도로 재정사업의 효과나 성과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③ PBS는 정부의 기능이나 사업·활동·성과 등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운영상의 절약과 성과의 효율성에 초점을 둠으로써 예산과정에서의 관리적 측면을 강화하려는 제도이다.

④ PPBS는 정부활동의 목표와 그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과 기획 기능의 연계를 강조함으로써 예산과정과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예산제도이다. 그러나, 예산과정이 집권적이며(하향식으로 결정된다), 정치적 과정이 배제됨으로써 의회지위가 약화되고 예산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PPBS는 예산결정과정을 국회에서 빼앗아 재간 있는 원가계산가에게 맡기는 것이라 평가된다.

① ZBB는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엄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예산제도이다.

09

정답 없음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정답은 ③으로 되어 있다. 물론, 실전에서 답을 찍고 나와야 한다면 필자도 ③번을 찍을 거다. 나머지 지문에서 문제될 건 없고, 교과서와 기본교재에서 통일성 원칙의 예외로 목적세를 특별회계와 별도로 적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별도로 편성되며,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도로 편성된다는 점에서 단일성 원칙의 예외에 속한다. 문제되는 부분은 목적세다. 목적세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거둬들이는 세금이다. 따라서, 목적세는 기타 특별회계로 계리되며, 예산단일원칙의 예외로 보아야 한다. 쉽게 말해, 통일성 원칙의 예외에 속하는 예산은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계리된다는 것이고, 이는 단일성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③번 지문은 맞다고 해야 한다.

10

①

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연합은 인정되지 않으며, 분쟁조정위원회(행정안전부 소속의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정부에 의한 갈등 조정방식에 속한다.

11

①

신행정학은 기존의 행정학을 비판하면서 현실적실성을 추구하며, 사회적 형평과 고객에 대한 대응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 참여, 환경에 대한 대응성, 행정의 능동성, 행정의 탈관료화를 강조하는 연구경향을 말한다.

① 정치적 중립은 전통적 행정학인 정치행정이론의 입장이다.

12

③

설문은 집중화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① 연쇄효과 혹은 현혹·후광효과는 앞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결과가 뒤의 평정요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평정요소에 대한 전체적 인상에 의해 평정결과가 영향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② 관대화경향은 평정을 관대하게 하는 경향을, 엄격화경향은 그 반대로 평정분포를 열등한 쪽에 집중되게 하는 경향을 말한다. ④ 선입견(상동화 오류 혹은 유형화의 착오)은 피평정자에 대한 선입견이라는 평정의적 요인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13

②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지만, ① 엽관제는 일반 하위계층에까지 공직을 개방함으로써 공직의 특권계급화를 방지했으며, ③ 실적제는 개인의 능력과 자격, 성적 등에 입각한 임용을 강조하지만, 출신성분(성, 인종, 지역 등)을 배제하며, ④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는 별개의 인사제도라는 점에서 틀렸다.

② 엽관제의 폐해로 등장한 정치행정이론과 실적제의 궁극적 목적은 민주성에 있다고 하겠다. 즉, 베버와 테일러 이론에 영향을 받은 윌슨 등의 행정이론의 출발점은 합리적 경제인으로서의 국민들의 물질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운영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정치로부터 분리된 중립적 도구인 관료제에 의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러한 관점은 행정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인식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문제되는 부분은 실적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민주적 목적이 주어져 있음을 전제로) 능률성과 전문성이라 한다면 엽관제의 민주성과는 대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경우, 실적제도 궁극적으로는 민주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적제는 수평적 평등(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은 맞는 지문이다.

14

③

① 머슬로는 욕구가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각 단계마다 확실적인 욕구를 추구하며, 좌절로 인한 퇴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③ 이에 대해 앨더퍼는 ERG이론을 통해, 욕구의 계층을 단계로 보지 않고, 추상성을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인간은 복합적인 욕구를 추구하며, 좌절로 인한 퇴행을 인정하였다. 지문에서 성장 욕구는 머슬로의 자아실현욕구에 속하며, 애정욕구는 관계욕구에 속한다.

② 허즈버그는 인간의 욕구를 별개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면서 작업환경과 관련되는 위생요인과 직무와 관련되는 동기요인으로 구분하였다.

④ 브룸(V. Vroom)은 VIE이론(혹은 기대이론)을 통해 동기가 부여되는 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15

③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이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이고,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에 속한다.

구 분	공식통제	비공식통제
외부통제	입법·사법통제, 옴부즈만	민중통제(NGO, 이익단체 등), 여론
내부통제	계서적 통제(감독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제도, 기타	행정윤리 공무원단체, 대표관료제

16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국공립공원은 잡종재산에 속한다.

행 정 재 산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보존재산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잡종재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

17

②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사무(기관위임사무)가 관리·집행에 있어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부장관이 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갈등에 대한 수단이 아닌, 중앙통제수단이다.

18

②

voucher(구매권 혹은 증서교부방식)란, 보조금 지급과 유사한 형태로,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 계층의 소비자에게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현금 액수로 표시된 권리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이다. 보조금 중에서 공급자에 주는 보조금을 grant라 한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보조를 subsidy라 하며, 소비자에 대해 주는 현물보조를 voucher라 한다.

ㄴ. 법무부의 보호관찰 사업은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갱생시키는 제도이다. voucher와 관련이 없고, 권력적 작용으로 위탁이나 민영화 적용되기 곤란한 분야다.

ㄷ. 기초노령연금 사업은 subsidy에 속하는 것이다.

19

②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정부운영에 활용함으로써 행정체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시민에 대한

대응성과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국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개념이 진화해 왔다.

구 분	정 의	초 점	이념(기반)
능률형 전자정부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국가 경쟁력과 정부 효율성 중시 공급자 중심 / 통제 지향	정부개입주의
서비스형 전자정부	고객지향적 열린 정부	정부 효율성과 서비스 질 중시 수요자 지향	시장주의
민주형 전자정부	성과 중심의 열린 정부	참여와 신뢰성 · 투명성 중시 전자민주주의 지향	파트너십

ㄱ. 최근 각국이 강조하는 부문으로 맞는 지문이다.

ㄴ.ㄷ. 정보기술을 통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ㄷ. 정보기술이 인간 중심의 휴먼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비대면적 민원 서비스의 확대는 고객과의 관계가 기계화되고 자동화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고객관계의 인간화는 잘못된 지문이다.

ㄹ. 정보기술의 취약성 중 하나다. 편리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통합이 요구되지만, 그만큼 프라이버시 보호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역기능에 속한다.

20

④

군대와 외교, 사법권은 자치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연방국가의 주정부에는 사법권과 주권이 인정된다(외교와 국방은 제외).

①② 지방자치단체 내부 문제는 조례로 규율할 수 있다. ③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과세 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은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